

일본의 극우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및 군사대국화 시도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안 번호	4537
----------	------

제안연월일 : 2009. 4. 13.

발의자 : 문학진 · 강성종 · 강창일
김재균 · 문희상 · 박기춘
박상천 · 박은수 · 박주선
박지원 · 송민순 · 신낙균
안규백 · 우제창 · 이미경
이석현 · 이용삼 · 이종걸
전병헌 · 정세균 · 천정배
최규성 의원(22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2009년 4월 9일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자유사(自由社)版 역사 교과서가 한·일간의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하고, 북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의 조기 경계 위성 보유 검토 등 우경화 및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역사와 한·일간의 불행했던 과거를 심각하게 왜곡한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일본 정부의 우경화, 군사대국화의 움직임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한·일 양국 간의 선린우호관계와 미래지향적 발전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및 군사대국화 시도 등 일련의 행동이 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 동북아 군비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에 저해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최근 일본 정부의 극우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핑계로 추진하는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일본이 과거 잘못된 역사를 은폐하고, 동북아의 패권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시도를 규탄하고 강력히 경고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또한 동북아 군비경쟁 확산에 동참하려는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함.

특히 일본정부의 최근의 행동은 일본으로부터 군국주의의 피해를 당한 대한민국은 물론 같은 피해를 당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회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임. 또한, 한·일간의 선린우호관계와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이라는 양국 정상간의 합의를 무시한 것임.

대한민국 국회는 이와 같은 일본의 행위에 대하여 개탄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동북아의 평화번영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